

# 수도권 과밀 해소 없인 지방 소멸 못 막는다

### 국가 불균형 최대 원인은 정부의 편중된 재정 투자 60년간 재정 배분 15%...가장 큰 피해지역 호남권 지방대학 생존 위협...전남대·조선대도 정원 미달 문화시설도 편차...정부 정책 균형발전 올인해야

지방 소멸과 그 결정적인 원인인 수도권 과밀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효율'과 '경제성'을 중시해 국가 재정을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의 편중 설치는 민간 자본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젊은 층은 물론 기회를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사회적 접착분부터 상업, 교육, 의료, 문화, 편의 등의 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일자리까지 갖춰진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미흡하고 낮은 수준인 지방의 끝자락, 면소재지부터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 해소에 국가 정책 올인해야=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지방 소멸이 곧 국가 소멸의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감이 국가 재정의 수도권 배정을 전면 금지하고,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방부터 인구 유입, 소득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내 대학, 대기업 등의 분산을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 감세 등의 인센티브를 강도 높게 적용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수준에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 불균형 정책, 가장 큰 피해지역은 호남권=과거 60여 년간의 정부 재정이 불균형하게 투입됐다는 사실은 이미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밝힌 바 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역사적 재정 불균형 개선을 위한 차등적 재정분권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1967년부터 2018년까지 61년 동안 3201조원의 지방재정 가운데 수도권과 영남권이 각각 36.8%(1179조원), 27.7%(885조원)를 차지했다. 호남권은 15.7%(502조원)에 그쳤다. 현재의 국가 불균형의 원인이 정부의 재정 투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정부의 재정 투자는 기반시설의 격차로 이어지고, 민간 자본들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없는 한 호남의 청년 인구 유출, 인구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퇴색한 호남 정치-민주당 지도부·주요 당직 포함 안 돼=민주 진영의 심장 역할을 해왔던 호남 민심을 지렛대로 한국 정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던 호남 정치권이 점차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시대에 걸맞은 정치적 비전과 리더십 제시 등에 실패하고 호남 정권 창출을 이루지 못하면서 정치 무대의 변방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호남 정치의 실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호남 정치권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1당 독점 구도에서 기인하는 정치적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부 결집을 통해 호남 정치권의 목소리를 키우기보다는 정치력 부재로 특정 계파에 줄서기에 나서는 등 각자도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불신과 묻지마 물갈이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 구도를 만들면서 호남의 미래 역량 약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존 위협 받는 지방 대학, 전남대마저 정원 미달=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오래전에 나올 정도로 지방 대학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는 지난해 140명이 정원 미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데 이어, 올해도 총 정원이 38명 미달했다. 조선대도 작년(-128명)과 올해(-15명)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올해 내놓은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입학생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10년 만에 17.9%나 줄었으며 다음으로 경남(-16.6%), 전남(-16.4%), 경북(-15.6%), 충남(-15.4%), 전북(-14.7%) 순이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등은 지난해 '인구변동과 미래전망:지방대학 분야' 보고서에서 2042~2046년 국내 대학 수는 190개로 예상했다. 전남의 경우 5개 대학 중 1곳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광주·전남지역뿐 아니라 전국 지방 대학의 위기는 지방 소멸을 가속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같은 세금 내도 문화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지방=예향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의 문화 인프라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서관과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이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역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는 도서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인프라와 공연 시설 등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광주는 문화 시설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른 문화시설도 전국과 비교해 광주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미술관은 14개, 문화예술회관 7개, 지방문화원은 5개밖에 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전국 평균은 각각 18개, 15개, 14개에 달했다.

문화시설 인프라 가운데 가장 미흡한 분야는 문학 분야다. 전국에 약 140여 개의 문학관이 있지만 아직까지 광주에는 단 한 개의 문학관도 없다. 다행히 올 연말 광주문학관이 개관할 예정이지만 광역 시기엔 '문학관이 없는 도시'라는 오명은 광주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인용되곤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영당사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목요상, 유홍수 상임고문과 당직자들이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여야 새해벽두 일몰법안·국조특위 놓고 2차전 예고

### 1월 임시국회 소집 치열한 공방 이상민 장관 탄핵 등 격돌 전망

여야는 신년 벽두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된 법안 입법 등을 놓고 격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대치했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칼끝이 이재명 대표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추진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도 공식화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몰·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 시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여야 충돌은 당장 오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지방 전주해·주소지 의원에 대한 '도독 촬영' 의혹을 이유로 당시 2차 기관 보고를 파행시켰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원할한 국정조사 운영의 전제

조건으로 꼽고 있어, 국정조사 청문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의 파행 의도'라고 일축하고, 향후 청문회에서 서울시의 유족 명단 제출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증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이후엔 이 장관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이다.

오는 7일로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을 공식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청문회 기간이 남은 만큼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일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은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사위에서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점 법안이 법사위에 묶일 경우, 수적 우위를 앞세운 직회부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

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직회부 활용 대상 법안으로 거론된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를 건너 뛴 채 직회부 카드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경우 극한 여야 대치 국면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28일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협 의제'는 오는 4일 한 달 만에 재가동된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협의제 논의에도 진전을 보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를 놓고도 한동안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북한 도발에 대한 군 당국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전일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한편, 야 3당에 '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안보 무능마저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안보 공백'을 따져 묻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원회 청문회를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www.kps.co.kr

## Green Energy와 함께, 사랑받는 지속성장 기업 한전KPS!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가 ESG 경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b>E</b> 환경 Environment	<b>S</b> 사회 Social	<b>G</b> 지배구조 Governance
지속성장을 위한 그린에너지사업 확대	국민 체감·업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윤리·투명· 안전경영 강화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정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